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 물 관리 일원화로 체계적인 물 관리 나선다

글\_강나은 | 객원기자  
naeun113@naver.com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제13차 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5월 28일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 관리 거버넌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부서가 환경부로 이관됐고,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주체가 통합되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이제 시작이다. 물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 과학자 모두가 의견을 내고 협력할 때 일원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림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사)한국환경한림원은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제13차 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기반 마련

첫 발제를 맡은 박천구 환경부 차관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발표했다. 환경부는 낭비 없는 물 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 확보, 물 관리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핵심전략으로 잡았다. 박 차관은 “낭비 없는 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현명한 물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물 이용 건전성 제고와 유역 중심 거버넌스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급수취약지역을 해소하고, 먹는 물 공급을 효율화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홍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 침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 관리 혁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염원 관리를 선진화하여 물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 물 관리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올해 안으로 ‘통합 물 관리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업무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국토부, 수자원공사와의 협업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조직과 행정체계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1차 토론은 ‘조직과 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장덕진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이창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최흥석 고려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강찬수 논설위원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사이의 물 관련 업무 재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 (그림 2) 첫 발제를 맡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낭비 없는 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물 이용 건전성을 제고하고 물 공급 신뢰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물 복지가 우선시 돼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업무 조정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한다.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업무별로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선택해 관련 업

무를 집중시켜야 한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나 너무 큰 조직은 또 다른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외부에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호의존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하수도 민영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민영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는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민영화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곤란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서동일 교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도물을 직접 음용수로 사용하는 인구는 많지 않다. 수도물이 정수 처리 또는 고도정수 처리까지 되어 수질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망과 수조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꼭지의 수도물 인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및 행정안전부 소관의 소하천 관리 등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녹지나 개인주택 차원의 빗물 관리기법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량과 수질관리 차원에서 적용돼야 한다. 현장의 상황에 걸맞는 적합한 장치와 관리 방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물 관리 일원화 조치는 국토부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이전한 것으로 한

정해 해석될 일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지체되어 온 물 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싶다. ‘댐 건설 계획’을 ‘댐 관리 계획’으로 개편하는 내용은 더 근본적인 개혁으로 발전해야 하고, 물 이용 부담금의 용도를 확대하거나 사무국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역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수도계획을 국가계획과 광역지자체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은 진보한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 계획을 유역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창석 교수는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물이 모이는 집수역 전체와 종착역인 바다까지 포함하여 모든 자연을 통합 관리하는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러한 통합 관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직체계도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물그릇을 되찾기 위한 생태적 복원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제대로 된 물그릇을 확보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근본적인 물 관리를 강조했다.

최홍석 교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일원화가 통합 물 관리와 통합 유역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매우 다른 조직인데, 통합을 통해 환경의 전 영역을 다룰 것인지, 물 관리 전문성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물 관리 일원화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어야

2차 토론은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강찬수 논설위원은 “통합 물 관리의 목표는 부처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이 돼야 한다.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해져야 하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부터 복원하여 재자연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서동일 교수는 “주요 지천의 유량 및 수질 자료는 존재하지 않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측정하는 자료



▲ <그림 3> 주제발표에 이어 '환경정책 100분 토론'으로 2차례 토론이 이어졌다. 1차 토론은 '조직과 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들은 국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토론은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통합 물 관리를 위해 오염원 관리 선진화, 초기 빗물 처리 방안, 하천 복원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자료 수집부터 필요하다. 오염원 관리 선진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이다. 물 산업의 국가적 성장을 위해 분야나 지역을 국한하지 말고, 다각적인 분야와 지역에서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형철 공동대표는 "4대강 보호 처리방안과 더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 관리 과정의 초기 빗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물관리기술 R&D 2030 로드맵' 수립 시 엄격한 평가 기준과 목표를 도입해야 한다. 4대강은 자연성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 생태계가 전체 생태계에서 더욱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복원하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로드맵에 추가될 내용을 설명했다.

이창석 교수는 "하천 복원의 최근 세계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복원 동향이 전혀 다르다. 즉 생태계 모델은 유입환경과 유출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형적인 공원 하천을 조성한다면, 이는 복원 수준이 낮은 것이다. 하천 복원 시에는 부지를 넓게 확보하고 다양한

횡단면을 조성해야 한다. 식생은 지역의 자생종을 도입하되, 외래 및 외지종은 배제해야 한다.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형을 허용해야 홍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수변식생의 띠, 유역관리, 거시적 관점에서의 네트워킹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천 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홍석 교수는 "통합 물 관리의 개념은 물, 땅, 관련된 자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물 관리 문제가 국가 사회발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에 합당할 수준의 조직적·재정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부는 아직 대부처 수준의 조정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토론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환경부 집행력을 키워야 한다', '상하천은 물론 그 이전단계부터 물 관리가 필요하다', '수량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다', '수질보다 수자원 측면의 정책이 대부분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환경부에서는 2년간 물 관리 일원화를 준비할 텐데,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우선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봐야 할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히며, 물 관리가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ST**



▲ <그림 4> 주요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포럼을 주최한 과총 김명자 회장은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주체가 환경부로 통합된 만큼 이제는 물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 과학자 모두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